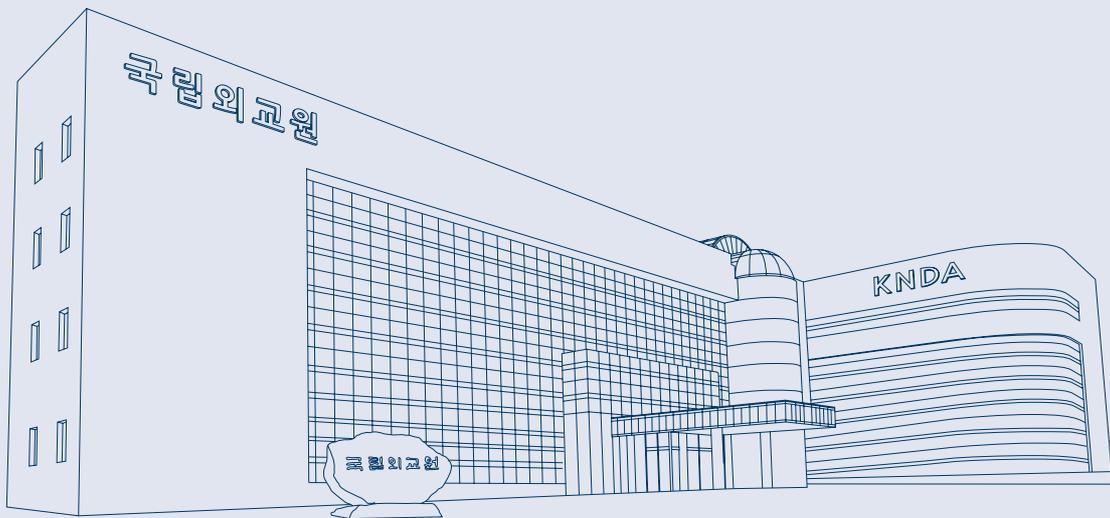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01

# 2018 국제정세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행일 2018년 1월 3일  
발행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집집 「2018 국제정세전망」 편집진  
디자인 역사공간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mailto: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2018 국제정세전망

## CONTENTS

2018 국제정세전망 서문	01
2018 국제 정치·경제 개관	03
한반도 정세	04
동북아 정세	06
주요 지역 정세	12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9



---

## 2018 국제정세전망 서문

2016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국제정치적 변화들은 2017년 국제관계에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2017년은 국가들이 그러한 불확실성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들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출범이 예고한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탱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17년은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회복력(resilience)’ 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도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불확실성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화·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도 자유주의 정치·경제 국제질서하에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낸 한국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증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정세에 대한 냉정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한국외교에 대한 총체적 검토와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2018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합니다. 올해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진은 한반도와 동북아, 주요국·지역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과 통상, 국제법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여 2017년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국제정세를 전망하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연구소의 노력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국민외교’가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끝으로, 이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필에 참여한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편집을 담당해준 강선주·김현욱·전혜원·이효영·황일도 교수, 고동우·유지선·노유경·정혜영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외교안보연구소장 **백지아**

---

## 1. 2018 국제 정치·경제 개관

- » 2018년 예상되는 국제 정세 흐름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과 고립주의라는 ‘원심력의 도전’과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구심력의 응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 세계 질서: 중국·러시아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기존 다자체제를 비판해온 미국의 행보도 조정될 공산이 큼.
- » 동아시아 질서: 선부른 세력 우위 추구보다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현상 유지가 주요국의 공통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북핵 문제: 비확산 체제와 역내 안보 질서를 흔들려는 북한의 도전이 날카로워질 수록,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 사회의 일치된 응전 역시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임.

---

## 2. 한반도 정세

### 가. 북한

- 
-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 기반 사회 통제 강화 지속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급화(국산화) 총력 추진
  -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확보를 통한 핵무력 완성 추구
  -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2018년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은 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를 기반으로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공포 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조직적 반항은 제한될 전망이다.

» 2018년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대비해 경제 자급화(국산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북한 정권은 핵융합 수소탄 능력과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전략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핵무력 완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북한의 외교는 ‘화성 15형’ 미사일의 실각 발사 및 재진입 기술 실험의 성공 여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성공 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큼.

---

## 나. 남북 관계

» 2018년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핵 문제 악화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따른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제재·압박 일변도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보다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남북 관계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할 때 경색과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남북 대화와 교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다소 유연한 관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한반도에서 '계획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작으나 현재와 같이 극도로 높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는 '우발 전쟁'의 가능성, 특히 김정은이 체제 및 정권 위기가 극심할 때 내부 평정을 위해 '제한전'의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 한국의 '평화 정착' 중심의 적극적 대북 정책 추진
  - 남북 관계의 정치적 유동성 증가와 남북대화 모색
  - 한반도 내 '우발 전쟁' 가능성 상존
-

---

## 3. 동북아 정세

### 가. 동북아시아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지속
- 미-중 경쟁 증대 속 협력 기조 유지
- 역내 주요국 간 복합적 구도 지속
- 아시아 지역 구도의 안정성 유지
- 중일 관계의 안정화

» 2018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중동 및 유럽에서의 관여를 자제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자주의적 지역 경제 통합에는 소극적이겠지만,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비전을 통해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에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강화와 무역 압력으로 인해 미·중 간 경쟁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양국은 갈등 수준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은 중국과의 첨예한 경쟁 속에 전략적 안정화를 추구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일정 수준의 대미 견제 협력 속 반미 동맹 형성에는 소극적인 것이므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 대 '중·러'의 냉전적 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아시아 지역 구도는 여전히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을 기초로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나. 미국

»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협력 관계는 개별 정책의제에 관한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한적일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경제는 2018년에도 견고한 고용 시장과 민간 소비 확대에 힘입어 2%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실시된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보듯이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중간 선거에서의 공화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와 「4개년 국방검토(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대체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을 둔 대외 전략 개요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행정부·의회 간 제한적 협력과 대통령 지지율 저조화
  -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
  - 중간선거 승리를 향한 공화민주당의 대결 본격화
  -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NSS 및 QDR 보고서 발간
  - 인도-태평양 비전의 구체화 및 아시아 전략의 본격 추진
  - ‘북미 대화’ 가능성 희박 속 마중 간 제한적 ‘대북 정책’ 협력
  -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 노력
-

---

» 2018년 북한의 완고한 태도에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미국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측에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전략자산 등의 비용 부담도 일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중국

- 
- ‘시진핑 지도부 2기’의 리더십 강화 속 개혁 추진 본격화
  -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실현 노력 가속화
  - ‘분발유위’ 및 국익 우선의 적극적 외교 추진
  - 군 개혁 및 현대화 작업 지속
  - 기존 대북 정책 및 한·중 관계 유지

»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2기의 첫해가 되는 2018년 중국은 이전보다 강화된 시진핑 주석의 권위와 지도력을 중심으로 반부패와 정치 개혁, ‘공급측 구조개혁’과 ‘신(新)시대’의 ‘신(新)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경제 개혁, 그리고 중국 특색의 현대화 강군 건설을 위한 군 개혁이 지속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시진핑 지도부 2기가 시작되는 2018년의 중국 경제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 2016~2020)과 ‘공급측 구조개혁’의 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중국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적극적 외교(assertive diplomacy)’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주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지속해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도 중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나타난 군 인사 추이와 당 중앙 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사위')에서 강화된 시진핑 주석의 권위와 장악력을 바탕으로 군 개혁과 군 현대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19차 당대회 이후 나타난 시진핑 2기 지도부 인적 구성이 2018년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라. 일본

» 총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동력 및 정국 운영 주도권을 확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8년 개헌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나, 개헌 관련 각 당의 입장을 극복하고 폭넓은 합의안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일본 경제는 무역 자유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 때문에 디스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이며, 재정 부양책 효과 소멸 및 임금 개선 부진에 따른 소비 여력 약화로 인해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아베 내각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 지속
  - 경제 활성화 정책(아베노믹스)의 지속 추진
  - 2012년 이후의 대외 정책 기조 견지
  - 한일 관계의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 상존
-

---

» 2018년 일본은 중·러와 소극적 안정화 및 현상 유지 상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아 한·미·일 및 호주·인도·아세안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한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 지역 전략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겠지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결과 등 과거사 문제에 따라 양국 관계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임.

## 마. 러시아

- 푸틴 집권 4기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 추구
- 대미대서방 신냉전 구도의 공고화
- 대미 균형을 위한 비대칭적 러중 협력 관계의 강화
-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중재자?
-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한국 ‘신북방정책’ 접점의 구체화

» 2018년 러시아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되며,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비전하에 동북아시아, 유럽, 중동 등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외 행태를 펼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러·미 관계가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사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등으로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미국을 자국 민족주의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타자(the Significant Other)’로 설정함에 따라 2018년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관계는 신냉전의 대결적 구도하에 놓일 것으로 보임.

---

» 냉전 종식 후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 온 러·중 협력 기조는 201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불협화음도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함께 정치적·외교적 방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3단계 해법'을 제시해 왔는데, 2018년에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보임.

» 2018년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2017년에 윤곽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가시화되는가를 가늠하는 해가 될 것임.

---

## 4. 주요 지역 정세

### 가. 동남아시아

- RCEP 협상 타결 노력 지속
-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 개시
- 태국의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실시 불투명
- 말레이시아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
- 미얀마의 로힝야 소수 민족 문제 해결 난항

» 2018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것이나, 16개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함.

» 2018년 ASEAN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수립을 위한 공식 협상을 원만히 개시해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나, 협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향후 완전한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임.

» 태국은 2018년 11월 총선 실시가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총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현 집권 군부 세력이 계속 집권을 연장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2018년 중 조기 총선이 예상되는 말레이시아도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의 대규모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의 승리가 예상됨.

» 2018년에도 미얀마 정치의 핵심 쟁점은 로힝야(Rohingya) 이슬람계 소수 민족 문제로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함께 ASEAN의 내부적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나. 서남아시아

» 2018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과 견고한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 개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인도양 지역을 둘러싸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을 통해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과 이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인도 간에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간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 진전 여부는 인도의 참여 정도 및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 모디 총리의 견고한 정치 기반 위 경제 개혁 지속
  - 인도양 지역을 둘러싼 중국-인도 간 전략적 경쟁 격화
  -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 하 미일인호 협력 가능성
-

---

## 다. 유럽

- 영국의 내분으로 EU 탈퇴 협상 난항
- 안보·방위 통합 진전과 자유무역 확대
-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 추진 적극화

» 2018년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로 야기될 법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 우려 속에 대내적으로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지속적 사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유럽 각국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부담 요구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경제 회복에 따라 개별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집단적으로는 유럽 차원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EU와 일본·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호주·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 타결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유럽은 2017년 선거를 통해 출범한 주요국 정부들이 대내 지지 기반을 다지는 한편 그동안 선거 일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라. 중동

»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적 견제와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절대 권력에 근접한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승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 2018년에도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 하원의 동 협상 재검토 결과 여하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경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양국 관계는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갈등 양상이 순니(Sunni)와 시아(Shia)의 종파 싸움으로 확대·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순니파 사우디아라비아 측을 편드는 '미국'과 ▲시아파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 간 갈등 관계 형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8년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의 온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리아 내전 종료를 위한 정치적 해법 모색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 러시아, 이란, 터키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시리아 평화회담 개최 가능성도 높아 보임.

» 2018년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의 해체 및 소멸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단위 테러리스트들의 발호로 글로벌 테러리즘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18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Palestinian Authority) 간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양자 간 분쟁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 사우디 왕위 승계 가능성 고조 및 왕세자의 적극 행보 가속화
  - 이란 핵 협상 관련 논란 재점화 속 미-이란 관계 긴장 지속
  - 순니시아 종파 갈등에 따른 '진영론' 부상
  - 시리아 문제의 정치적 해법 모색 시작
  - ISIS의 쇠락과 후폭풍: 글로벌 테러리즘의 확산
  - 이팔 갈등의 지속과 '2국가 방안'의 동력 상실
-

## 마. 중앙아시아

- 권위주의 정치 우세하의 정국 안정 유지
- 역내외 국가들과 경제 협력 확대 및 통합 노력 경주
- 역내 국가들 간 외교·안보 협력 확대 지속
- 러·중·마인 등의 대(對)중앙아 세력 경쟁 속 협력 확대 추진

» 2018년에도 중앙아시아에서의 권위주의적 정치 우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국가에서 경제 여건의 악화, 지역주의 분출에 따른 소요가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8년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을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여건 개선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역내 경제 협력 확대 및 통합, 그리고 자국의 경제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 분쟁, 국경 분쟁 등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잘 관리하면서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 환경 문제, 다자 협력 등에 대한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미국, 인도 등 역외 주요 국가들의 세력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바. 아프리카

» 2018년 아프리카에서는 저발전, 국가 역량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bad governance) 등의 만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전 및 ISIS 세력에 의한 테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아프리카에서는 장기 집권 체제에 대한 저항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대통령의 실각이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이 심한 카메룬, 적도기니,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영향을 주어 반정부 저항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민주주의 제도가 취약한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폭력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2018년에도 저발전·내전·정치적 박해를 벗어나기 위한 아프리카 난민들의 이주가 계속될 것이나, 유럽의 난민 유입 억제 정책으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난민들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 내전 지속 및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확대
  - 장기 집권 체제에 대한 반정부 시민 저항 심화
  - 선거 결과를 둘러싼 갈등 고조
  - 아프리카 발(發) 난민 문제 지속
-

---

## 사. 중남미

- 
- 미국의 대선 공약 실행에 따른  
역내 불안정성 확대
  - 대외 여건 개선과 개혁 정책  
가속화에 따른 경제 회복세
  - 선거 정국과 권력 지형 불확실성  
증대
- 

»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었던 주요 선거 공약들을 실제 이행할 경우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중남미 경제는 그동안 역내 경제 침체의 주원인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대외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역성장에서 벗어나면서 경제 성장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선거 정국에 돌입하는 주요국들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선거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권력 지형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

## 5.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 가. 국제 금융·통화

» 미국 달러화는 2008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로서 부동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EU의 경제 회복과 미국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 비추어볼 때, 2018년은 미국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가 약화되는 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달러화의 약세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 관리 지속
- 신흥 경제국: 성장 전망과 금융 불안의 공존

» 2018년 중국 경제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관리 모드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세계 경제에서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로의 부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신흥 경제의 전망은 거시경제 건전성의 향상과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국제 여건으로 인해 긍정적이거나, 선진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나. 국제 통상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는 혼란을 겪고 있으며, 오랫동안 성과가 지지부진한 다자

- 복수국간 무역 자유화 협상의 정체와 다자 무역 체제의 위기 지속
- 일본 주도의 CPTPP 타결에 따른 RCEP 협상 가속화
- NAFTA 개정 협상 시한 연기 및 한·미 FTA 재협상 속개
- 미국 주도의 보호 무역주의 기초 확산 및 다자적 대응 노력

무역 협상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복수국간 (plurilateral) 무역 협상의 정체도 지속되면서 2018년에도 다자무역 체제의 위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을 제외한 11개 당사국 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타결되어 2019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2018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당초 2017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은 2018년 1/4분기까지 협상 타결 시한이 연장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 역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의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18년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미국 주도의 보호 무역주의 추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및 APEC 정상회의, WTO 각료회의 등 다양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적 대응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다. 국제법

» 2018년에는 전쟁 범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국제 형사 책임 추궁, 그리고 통상법 및 해양법 분야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 재판소와 같은 국제법의 분쟁 해결 기구 절차를 활용하는 등 ‘법의 지배(rule of law)’ 확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도 남중국해 및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인접국 간의 분쟁은 지속될 것이며, 이 문제의 포괄적 해결 방안 도출은 어렵겠지만, 우발적 군사 충돌 등으로 인한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2018년에는 기존의 유엔 해양법 협약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BBNJ: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규율하기 위한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진척은 더딜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에는 유엔을 중심으로 미·서방과 중·러 간 사이버 공간 상의 주요 국제법 및 국제 규범 정립, 테러리즘, 데이터 보호,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논의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국제법의 규범력 제고 노력 지속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지속 및 ‘행동규범’ 마련 모색
  - BBNJ에 대한 해양법 회의 개최 가능성
  -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정립 및 거버넌스 주도권 경쟁 심화
-

---

## 라. 기후변화

- 파리협정 세부규칙 문안 작성 협상 본격화
- 미국의 영향력 쇠퇴 및 중국·EU 등의 영향력 확대
- 기업, NGO 등 비(非)당사국 행위자의 역할 강화

» 2018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세부규칙(rulebook) 마련을 위한 문안 협상이 본격 개시되었지만, 주요 의제별 쟁점들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종료 시한인 2018년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보임.

»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후 퇴조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려는 중국·프랑스·영국 등의 노력이 2018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기존의

선진국-개도국 차별화 주장을 동시에 개진함에 따라 파리협정 후속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파리협정 타결 이후 미국 내 기후변화 대응 민간 기업 연합, 지방 정부 차원의 국제적 네트워크 등 비(非)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이 적극화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